

# 광주 ‘민주주의전당’ 유치 물거품

남영동 대공분실 ‘수용’ 입장정리 비상대책 회의 열어 계획 논의 민주인권기념파크에 포함 의견도

광주시가 10년 넘게 추진해왔던 ‘한국 민주주의 전당’ 유치가 사실상 무산됐다. 최근 정부가 민주주의 전당 건립 부지로 과거 경찰청 대공분실이 있던 서울 용산구 남영동으로 가닥을 잡은 데 대해 광주시도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민주주의 전당 광주 유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민주주의 전당 광주 유치 경과보고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다.

2016년 2월 꾸려진 비대위는 담당 공무원을 비롯해 5·18 유족, 시민사회 단체 대표 등 모두 41명으로 구성됐다.

비대위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10 항쟁 기념식에서 발표한 서울 용산구 남영동 대공분실 민주기념관(민주주의 전당) 건립 계획을 존중하기로 했다.

김근태 의장이 고문당하고 박종철 열사가 희생된 남영동 대공분실은 그동안 보안분실로 사용되다가 2005년 10월 경찰청 인권센터로 바뀐 곳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주의 전당’ 유치가 무산될 경우 옛 광주교도소 자리에 추진 중인 ‘민주인권기념파크’에 민주주의 전당의 콘텐츠를 포함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기본계획 재수립 중인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사업에 민주주의 전당의 기능을 반영하자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이들은 광주에 민주인권과 문화를 두 축으로 하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했다.

광주의 5월과 민주인권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주재단 설립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광주시는 이달 안으로 비대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민주주의 전당’ 유치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확정할 방침이다.

민주주의 전당 건립 사업은 11만5천㎡의 부지에 1천400억원을 들여 민주화운

동의 역사 자료관, 상실 전시관, 교육센터, 연구소 등을 갖춘 것으로 민주주의의 산 교육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2001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이 제정되고 이듬해 기념사업회가 구성되면서 본격 추진됐고, 2007년 광주에 유치위원회가 구성된 데 이어 마산(창원)에도 유치가 구성돼 치열한 유치전을 벌였다.

그러다 2013년 11월 ‘역사적 상징성과 민주도시로서 정체성을 가진 서울·광주·마산(창원)에 삼각 축으로 민주주의 전당을 건립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3개 도시 간 체결됐다.

하지만 2015년 12월 기념사업회 이사회가 ‘정부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며 협약 무효화를 결정하면서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됐다.

한편 광주시가 추진 중인 민주인권기념파크는 옛 광주교도소 부지 10만6천771㎡에 1천145억원을 들여 인권교육훈련센터, 인권평화교류센터, 김대중대학원, 인권평화기념공원, 인권 유스호스텔 등을 짓는 내용이다.

/광주=봉채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장성군 열린혁신 원정대

## 장성군 공무원들, 부산 혁신사례 ‘벤치마킹’

공직자 마인드 향상 교육

장성군 공무원들이 혁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한다. 장성군은 6급 이하 공무원, 무기계약직 직원 400여명이 오는 10월까지 부산에서 공직자 마인드 향상 교육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부산의 혁신 우수 사례를 전 직원이 공유하고 장성 실정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군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50명씩 여덟 차례에 걸쳐 2박 4일 일정으로 열린다.

교육생들은 ‘장성군 열린혁신 원정대’를 구성해 부산의 청소년 전용 인문학 서점인 인디고 서원, 우리라는 단일 아이টে이머 성공한 유우카페 초량, 부산의 대표 떡볶이인 삼진어묵의 성공스토리를 접할 수 있는 삼진어묵 체험역사관, 공공미

술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주민 참여 활성화 전략을 배울 수 있는 감천문화마을, 전국의 몇 안 되는 현채방 골목인 보수동 책방골목, 부산에서 가장 큰 만물시장인 부평 강동시장, 부산의 역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이바구길 등을 방문한다.

장성군은 스토리텔링의 힘, 지방자치단체 혁신 사례 등을 배울 수 있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장성군의 색채마케팅인 ‘엘로우시티 프로젝트’의 발전 전략을 세우는 동시에 공직자 역량 강화, 유기적인 공동체 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조직은 물론이고 지역까지 바꿀 수 있다”라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군 공직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장성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가 발굴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남 장성=봉채영 기자

# ‘전남지사 호화판 한옥 공관’ 매각한다

신축비 11억3200만원 투입 ‘논란’ 김영록 “공관용도 전환·매각 검토”



전남도지사 공관 전경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한옥 공관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할 뜻을 밝혀 호화판 논란이 있었던 한옥 공관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전남지사 관사는 전남도청이 금남로 시대를 마감하고 무안 남악으로 이전하면서 지어졌다.

박준영 전남지사 시절 무안군 삼향면 남악신도시 내 전남도청 뒤편에 착공 1년 6개월만인 2006년 10월 도지사 공관(일명 어진누리)을 완공했다.

사적 건물이 아닌 200만 도민의 대표인 지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실상 공적 건물인 어진누리는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444.7㎡(134평) 규모의 목조한옥 팔작지붕 구조로 안채 369.8㎡(112평)을 비롯해 사랑채, 문간채, 지하기계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공관은 그러나 신축비로만 11억 3200만원이 투입되면서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볼 때 과도한 것 아니냐”는 식의 호화판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문제는 고액 건축비 잘못게 유지비도 만만찮

다는 점이다.

도는 공관과 사랑채, 문간채 관리비용 명목으로 연간 수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면적이 3배 가까운 모 광역자치단체 공관에 비해 관리비가 5~6배 많고 규모가 비슷한 또 다른 광역단체장 공관에 비해서도 5배 가량 많은 월세가 관리비로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해 전남도의회 김택 의원(목포)은 도정질문을 통해 “일제 강점기의 잔재이자 권위주의의 상징인 도지사 관사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가”라며 “관사(어진누리)는 현재 비어 있고, 영빈관(수리채)는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는 만큼 보육시설이나 문화시설로 도민에게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잘 아는 듯 김영록 전남지사는 10일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도지사 한옥 공간은 상징성이 있고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지만 공간이 크고 개방형이어서 인력과 경비가 많이 소요된다”면서 “공관용도를 폐지하고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사용하거나 매각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의 뜻에 따라 10여년만에 한옥 도지사 관사가 없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남 무안=김남중 기자 5555knj@

## 전남도 ‘산촌진흥 10개년 계획’ 확정·시행

전남도가 낮은 소득, 인구 과소화·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산촌진흥 10개년 계획(2018~2027)을 확정,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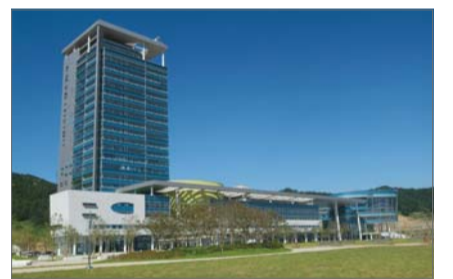
10일 전남도가 발표한 산촌진흥 10개년 계획에 따르면 산촌의 경관자원 개발, 청정임산물 고부가가치화, 산촌관광 자원관리, 산촌리더 양성과 마을간 협력 강화를 위해 ‘매력있는 산촌’, ‘융복합의 산촌’, ‘체험휴양 산촌’, ‘상생발전 산촌’ 등 4개 전략, 16개 중점 추진과제를 추진한다.

소요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등 760억원이다.

전남지역 산촌은 17개 시군 53개 읍면 540개 마을로 이뤄졌다.

면적은 31만ha로 전남 전체의 25.3%를 차지하고 있다.

산촌은 ‘산림기본법’에서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 이상, 인구밀도가 전국 읍면의 평균(106명/㎢) 이하, 경지면적 비율이 전국 읍면의 평균(19.7%) 이하인 곳으로 정하고 있다.



전남도청 전경

전남도는 기존의 산촌 개발사업이 생활환경 개선 등 기반 조성에 집중했던 것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산림휴양과 치유 등 산림복지시설과 연계한 산촌마을 조성으로 산촌 거점권역을 육성하고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촌관광을 조성한다.

또 주민소득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산촌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산촌 주민뿐만 아니라 귀산촌 예정자, 도시민을 위한 소프트웨어, 산촌마을 역량 강화사업에 집중하기로 했다. /전남 무안=김남중 기자

## 주차전쟁인데… “주차장 필요없다”

# 광주혁신위의 이상한 제안 ‘논란’

민선 7기 이용섭 광주시장의 인수위 역할을 한 광주혁신위원회가 광주송정역의 주차기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광주시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또 7년여 동안 표류하다 최근 백지화된 송정역 복합환승센터의 기능을 중장기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2011년 광주송정역에 복합환승센터 건립 사업이 국토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됐지만 7년째 진척을 보지 못하다 최근 백지화됐다.

광주시가 지난 5월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서희건설 컨소시엄에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종료’를 통보했다.

광주시는 복합환승센터 대신 코레일 주도로 300억원을 들여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광주혁신위원회 제안으로 주차타워 건립이 불투명하게 됐다.

광주혁신위원회는 ‘주차장 없는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를 내걸고 송정역

의 주차기능을 최소화를 주문했다.

농성역 광장 등 도시철도 1호선 주변에 환승 주차장을 설치해 새로운 상권을 형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들은 승용차 중심의 거대 주차장은 교통량 증가의 원인이 돼 광주송정역 교차로에 새로운 교통문제를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주말 최대 이용객 2만2천여 명인 이용객 수가 3만명 수준이 되는 미래수요에 대비한 역사 증축은 필요하다면서도 대규모 주차장 건립은 교통문제를 심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논리다. 광주송정역은 현재 주차난과 함께 교통체증과 혼잡을 보인다. /광주=봉채영 기자

## 합평군

###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추진

전남 합평군(군수 이윤행)이 마을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계획해 추진하는 ‘2018 합평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모분야는 ▲경제활성화, ▲공동체활성화, ▲생활환경개선, ▲기타분야 등 총 4개 분야로, 마을 공동작업장, 전통시장 및 상가 활성화, 마을 리더 육성, 소통 아카데미, 공동체 학습모임, 골목길 다듬기,

벽화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가능하다.

사업대상은 합평군 거주 5인 이상의 마을주민 모임(단체) 또는 마을공동체로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의 구비 서류를 작성해 각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이달 27일까지이며, 사전 서류심사와 합평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9개 읍·면별 각 1개 사업이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에는 5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합평군 지역경제과 지역공동체담당과 문의하면 된다. /전남 함평=양수현 기자 ysn6313@